

공공연대 노조, 광주시 보육정책 규탄

시, 일당제 대체교사 원장 직접채용 허용 “지침 과대해석보육의 질 심각하게 저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대체교사 2년 기간제도 모자라 일당제로 원장직접채용을 허용한 광주시 보육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지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중 ‘보육 공백 시 어린이집에서 직

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을 근거로 일당제 대체교사 원장 직접채용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사가 지침을 과대 해석해 5개 구를 포괄 광역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구지역 센터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센터가 위치한 서구를

제외한 4개 구를 ‘육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해 대체교사를 원장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일당제 교사 예산까지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 원장 직접채용은 보육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심각한 보육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검증되지 않는 일용직 대체교사가 채용됨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기존 대체교사 사업이 축소,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채용권한을 원장에게 주

면서 친인척 고용, 서류상 채용 등 보육 현장 내의 예측 가능한 비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장 직접채용안 철회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보육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보육정책 수립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에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광주시 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소방헬기 추락사고에도 동일 기종 도입 추진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합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사고 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수송헬기를 도입하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독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에 따라 도입이 철회 또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입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당 460억원 상당의 28인용 수송헬기 2대를 내년부터 2023년쯤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양파 심어요 4일 오전 경남 함양군 지역민 한 양파논에서 한 농민이 이앙기를 이용해 양파 모종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각계 인사 1492명 시국선언...“정시확대 추진 취소하라”

교육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는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해 교사, 학계·과학계·의료계·종교계 인사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시민과 학부모, 교사, 학계, 종교계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1492명을 대표해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는 정시 비율 확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 대학에 따른 취업에서의 차별 등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문제를 단지 정시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든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을 타파해야 한다”며 “전 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조삼모사 식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술병에 붙이는 톱스타 사진 금지 검토

인기가 많은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주류회사 광고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광고가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술병을 포함한 주류 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류 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지 기준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으로만 명시돼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방식 등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광고가 청소년

연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명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율은 16.9%로 조사됐다. 2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위험음주율은 7.5%에서 8.9%로 1.4%포인트 늘었다. 위험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남성은 소주 5잔 이상, 여성은 소주 3잔 이상이 기준이다. 성별 청소년 음주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18.7%, 여성은 14.9%였다.

이슈 판결

머 명의 업체 만들어 회삿돈 30억 빼돌린 40대 ‘징역 5년’



어머니 명의로 만든 업체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30억원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일 밝혔다.

2016년 충북 청주의 한 생산업체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단가 1만8000원에 납품받던 먹곤을 다른 도매업체에서 7500원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1만6000원이 가장 싼 납품사인 것처럼 단가조사 비교표를 만들어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면서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차액 8000여만원

을 챙겼다.

또 회사에서 사지 않은 먹곤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지급 담당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회삿돈 29억여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3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4월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치밀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에 8억 70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고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평가권, 자필치료, 중환자 인허가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